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정숙 부연구위원

요약¹⁾

- 이 연구는 그간 청년정책이 주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에 따른 청년 사회활동의 변화에 주목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과 정책을 분석하였음. 또한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 사회활동 참여의 효과 및 사회활동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집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자체별 청년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지원'과 '공간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청년 사회활동 참여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인지적 역량(심리·정서, 관계형성, 협력, 개인 시민성 일부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 의식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청년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 제정 및 동법에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를 제안하였음. 또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 개별 지원 방안으로 활동비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음. 아울러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음.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고유과제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발체·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현재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 중 핵심은 일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일자리 정책만으로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청년정책은 대부분 취업과 창업 등 고용정책에 한정되어 왔음. 서구사회에서도 청년정책의 초점이 일자리에 맞추어져 있던 한 나라 대부분의 정책이 고용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음. 일례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는 고용문제를 포함하여 교육과 훈련, 참여, 사회통합, 건강과 웰빙, 문화·예술·여가, 자원봉사활동, 국제교류 등(European Commission, 2012)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음.
- ▶ 최근 청소년 분야 중 ‘활동’ 또는 ‘참여’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컨대 다양한 목적을 지향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시민사회단체(NGO, NPO) 활동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자발적 청년 조직의 등장과 관련한 활동들,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 참여 활동 등 청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회활동들이 등장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transition)이 지연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와 새로운 유형의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회활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분석하였음.
- ▶ 본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의 연령은 9세~24세인데 최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은 각 법안들마다 청년들의 연령 기준(19~34세, 19~39세)이 상이함. 그러나 통상 20대를 청년으로 명명해 온 점, ‘청년’의 연령 기준으로 ‘19~29세’까지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최근의 연구결과(김기현·하형석·신인철, 2016)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청년 연구대상을 20대로 한정하였음.
 -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상황에서, 20대에 이루어진 사회활동이 그들의 30~40대의 삶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영향을 주며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청년 연령을 20대로 한정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활동을 “일상생활 영역과 공적 영역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으로 정의하였음. “시민성은 시민으로서의 자기 확립과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과 역량”을 의미하며, 일상생활 영역에서 시민성이 제대로 발현될 때 공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시민성 역시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이선미, 2016: 60~63)을 고려하였음.

2. 연구결과

▶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결과

-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표 1]에 따르면, 2017년 10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 229개 중 49개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음. 그러나 지자체별로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 규정이 상이하여 지원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1]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2017. 10. 14. 기준)

구분	청년기본조례 제정 완료		전체
광역시 (17)	서울,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충북, 충남, 경북 ²⁾ , 세종,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15개
기초 ³⁾ (229)	서울(9)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49개
	인천/경기(8)	인천남구, 고양시,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충청/강원(12)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단양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옥천군, 청양군, 청주시, 충주시, 홍성군	
	영남(3)	부산동구, 부산서구, 창원시	
	호남/제주(17)	광주동구, 광주서구,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완주군, 장흥군, 전주시,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서 2017년 10월 14일 검색하여 정리
행정자치부(2017. 4.).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토대로 작성

- 청년기본조례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면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통점은 주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예컨대 일자리와 고용, 주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임.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동 전반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나 토대(예컨대 공간 지원)를 구축하고 정책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활동이 문화와 여가활동에 국한되어 있음.

- 한편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에서는 청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청년당사자 조직에 대한 지원, 청년들을 위한 공간 보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의미가 있음. 그러나 법안에서 다루는 활동들은 대개 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국제협력활동 등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청년들의 자기탐색 및 진로모색, 사회참여 등 다양한 실험적 활동들(진로에 대한 실험과 탐색,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 지역사회 참여와 개선, 당사자 조직 활동, 정책 참여 활동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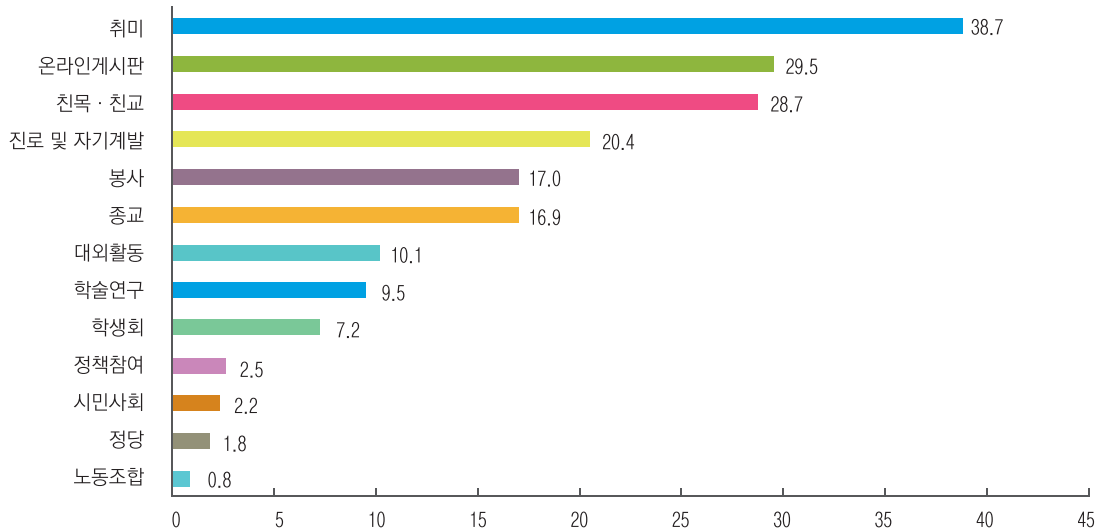
▶ 20대 청년 1,200명 대상 사회활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78.1%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활동 유형은 [그림 1]과 같음.
 - 20대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유형은 취미>온라인게시판>친목·친교>진로 및 자기계발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게시판, 진로 및 자기계발 활동은 20대 청년 사회활동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음.
 - 모임 규모는 '50명 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66.4%)을 보였음. 이를 통해, 청년들은 회원수가 50명 미만의 소·중규모 모임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2017년 10월 도의회 제출 예정

3) 서울: 25구, 인천/경기: 인천(8구 2군), 경기(28시 3군), 충청/강원: 대전(5구), 충북(3시 8군), 충남(8시 7군), 세종(1행정시), 강원(7시 11군), 영남: 부산(15구 1군), 대구(7구 1군), 울산(4구 1군), 경북(10시 13군), 경남(8시 10군), 호남/제주: 광주(5구), 전남(5시 17군), 전북(6시 8군), 제주(2행정시) 기준(행정자치부, 2017. 4.).

- 회원의 연령대는 '20대' 또는 '20~30대'로만 구성된 비율이 5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청년들은 20~30대 청년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1]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유형(중복응답)

- 사회활동 비참여 청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 못 느낌'(28.5%), '시간 부족'(24.7%), '관계형성 부담'(15.2%), '활동비 부담'(13.7%) 때문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관계형성 부담'과 '필요성 못 느낌'에 대한 응답은 비경활/구직자 집단에서 가장 높았음.
- 사회활동 비참여 집단 청년들은 사회활동 참여 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시간'(32.1%), '사회활동 참여 활동비'(23.2%), '사회활동 정보'(20.5%)를 제안하였음.
- 청년들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욕구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음.
- 청년들 중 85.9%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반면, 청년들의 77.6%는 지자체의 청년사회활동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음.
- 청년들은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35.4%), '공간(시설)'(32.3%)의 순서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그림2참조).
- 청년 공간(시설) 설치 운영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간에는 개방형 공간(교류)(34.3%), 폐쇄형 공간(22.2%), 신체활동 공간(18.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청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인지적 역량(심리·정서, 관계형성, 협력, 개인 시민성 일부 역량), 대인신뢰 및 공동체 의식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음.
- 이는 청년들의 활동 참여가 청년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 면담조사 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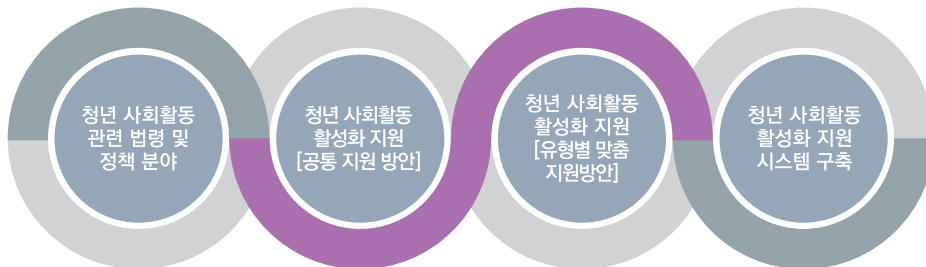
구분	주요 분석결과
① 사회활동 비참여자 	(1)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여건 부족 vs. 필요성 못 느낌 (2) 사회활동 의향과 활동 참여의 걸림돌 • 의향 있음 vs. 의향 없음 • 정보 부족, 경제적 문제, 까다로운 행정 절차 등 (3) 정책지원 욕구 • 경제적 지원 • 공간 지원 • 거주지 인근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정보 제공 및 홍보 • 활동 비참여자를 위한 인력 지원 → 비참여자가 은둔형 외톨이, NEET 집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담인력 지원 방안 마련 필요
②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자 	(1) 활동 참여 동기 • 사회적 경험 확대 •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활동 활성화 차원 • 사회적 관계의 확장 • 직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실험적 활동(문화예술 기획 등) 시도 (2)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활동에 미친 영향 • 관계 지속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제공 • 시행착오와 실수가 허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3) 활동을 통해 배운 점과 얻은 것 • 비밀 언덕, 안전지대 그리고 자양분 • 다양한 사람, 다양한 관점, '다름'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존중 • 다양한 선택지의 발견,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 • 의사소통기술 • 책임감 • 적극적인 삶의 태도 • 협업에 대한 배움, 함께 사는 마음가짐, 사람, 시민으로서 기여했다는 경험 등 (4) 정책 지원 욕구 • 공간 지원 • 지원사업의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 •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 • 비진학자를 위한 활동 정보 홍보 •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 청년활동 지원사업 확대/ 청년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인력 발굴 및 지원(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재능기부 자원자 DB 구축 후 활용 방안 고려)

구분	주요 분석결과
③ 지역사회기반 청년단체 및 당사자 조직활동 참여자 	(1) 활동 참여 동기 - 지역사회 내에 뿌리를 내리며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공간 지원 -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간 교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 청소년(만 9~24세)의 노동권의 향상에 대한 관심 (2) 활동을 통해 배운 점과 얻은 것 - 협력적 생존 방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 - 다양한 사람, 세대와 계층에 대한 이해 - 갈등 조율 역량 - 지역에 대한 정체성 (3)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 -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생존의 문제, 일과 삶의 불분명한 경계, 외연 확장의 어려움 - 지자체와의 협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지원사업 신청자격의 높은 기준, 지자체 담당자(기성세대)와 청년들 간 입장 차이, 지자체 사업에 동원되는 경우 - 활동 토대의 척박함: 지방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4) 정책 지원 욕구 - 활동에 대한 지원(기본소득) - 공간 지원 - 활동 단체들 간 네트워크 - 지자체와 청년활동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인력 - 예산비용의 융통성 - 청소년활동과 청년활동의 연계 필요 - 광역단위와 기초단체에서의 청년지원사업 이분화 →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 개인/단체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기존 취창업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 발굴)/ 지자체-청년단체 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류의 장 마련
④ 대외활동 참여자 	(1) 활동 참여 동기 - 스펙 쌓기,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2) 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 -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 인간관계기술, 의사소통기술, 갈등 조율 능력, 일에 대한 노하우, 자신감 등 - 협업에 대한 즐거움, 실무 경험 (3) 활동을 통한 부정적 경험 -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활동 →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활동 → 투입 시간 대비 얻는 것이 없고 '시간이 아깝다'는 인식 증가 - 대외활동을 발미로 주최 기관의 홍보 수단으로 동원 (4) 정책 지원 욕구 - 활동유형과 형식 확대: 청년들이 직접 활동 기획 - 활동에 대한 홍보 - 공간 지원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청년에 대한 배려(사후정산의 문제점) - 활동에 대한 사후관리(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대외활동의 형식과 내용 개편(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개편, 직접 기획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⑤ 정책참여 활동자 	(1) 활동 참여 동기 - 민관 거버넌스 협치 모델에 대한 관심과 참여 - 지역에서 서울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적용해 보고 싶은 바람 (2) 활동의 의미와 가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것 - 동료 & 동료들 통한 지지 - 공동체 의식 - 자신을 알아가는 자기 실험, 자기주도학습의 실천 - 경청,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3)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 -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의사소통방식 - 청년에 대한 보수적 관점과 불신,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 - 후발주자로서의 조급함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 부족 - 청년 범주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고려 부족 (4) 정책 지원 욕구 - 정책참여 과정에 대한 태도 교육 - 행정 절차 간소화 - 공간 지원 - 취업 중심의 정책 탈피 & 청년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 지자체-청년들간 신뢰와 이해 제고를 위한 상호교류 필요 및 지자체 및 공무원들의 태도 개선(정책참여 활동의 의미와 가치 인식/정책 파트너로서의 존중)

구분	주요 분석결과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 	(1)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 불신 vs. 신뢰 → 초기에는 상호 이해 부족으로 불신하는 경우들이 다수 나타남 (2)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과에서의 지자체별 차이 • 청년 사회활동지원에 대한 단체장의 인식 차이 • 청년 당사자 조직 유무 및 역량 차이 • 행정 지원의 차이 (3)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 중앙정부 수준 •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정책 총괄기구 신설 •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역할 분담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지방정부 수준 •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및 심화 프로그램 개발 •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 민관 협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청년의 정치적 효능감 제고와 상호 신뢰

3. 정책제언

- ▶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4개 영역에 대해 11개 정책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음.



[그림 3]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4개 영역

1)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및 정책분야

-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안」에는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청년 활동은 문화, 국제협력, 자원봉사, 단체 활동 등 일부 영역별 활동에 국한됨. 그러나 청년 사회활동은 친교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서부터 자원봉사, 문화예술, 스포츠, 정책참여, 지역사회 개선, 국제협력 및 교류, 사회참여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청년 사회활동을 청년 개인의 성장과 시민성 발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활동으로 확대하여 정의할 필요
- ▶ 또한 「청년기본법안」 내에 청년 사회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청년 사회활동 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 내용을 명시하여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
- ▶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에 ‘청년 참여 확대’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청년정책기본계획’에도 청년 사회활동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

2)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공동지원 방안

▶ 청년 개인에 대한 활동비 지원

-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의 청년들은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현재는 지자체별로 활동비 지원 여부에 차이가 있음. 향후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청년들에게 활동비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기존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2.0’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고, 개방형 교류공간 및 목적지향적 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활동 공간을 지원해야 함. 또한 청년 사회활동 코디네이터(가칭) 채용 및 사회활동 멘토와 같은 인력을 지원해야 함.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청년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3)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 사회활동 비참여자 및 대학 비진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사회활동 비참여자 집단은 다양한 이유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만큼 사회활동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방안 제공
- 청년 대상 지원사업은 대학진학 청년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활동 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진학 청년지원 사업 확대 필요

▶ 다수의 청년들이 공공기관의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기관에서 실무경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청년들에게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외활동 내용 재구성 필요

▶ 서울시에 비해 청년 인구와 전문가 풀이 다양하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과정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지방정부는 지역의 청년들을 중심에 놓고 정책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남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필요

4)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

▶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년주간’에 ‘청년과의 대화’ 개최 명시,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 독려 홍보 활성화

▶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년단체 활동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자체 청년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교류회 제공 필요

참고문헌

- 김기현·하형석·신인철(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선미(2016). 시민성 관점에서 본 자원활동: 새로운 유형과 관점. **NGO연구**, 11(1), 57~93.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 검색 (2017년 10월 14일 인출).
- 행정자치부(2017. 4.).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 http://mois.go.kr/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ld=BBSMSTR_0000000000055&nttl=58382에서 2017년 10월 13일 인출.
- European Commission(2012). EU Youth report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2SC0257&from=EN>에서 2017년 2월 11일 인출.